



으흐흐~ 이렇게 시원할 수가!

8월의 첫날인 구례군 산동면 지리산 수락폭포를 찾은 피서객들이 시원하게 쏟아지는 물 줄기에 몸을 맡긴 채 더위를 씻어내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

## 金부총리 자진사퇴 진통

교육위 청문회 뒤 “사퇴는 무슨 사퇴”  
靑·총리실 “여론 보자”...與 사퇴 촉구

당초 1일 판가름 날 것으로 관측됐던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거취 문제가 하루, 이틀 정도 늦춰질 전망이다. 김 부총리가 이날 국회 교육위 회의에서 자신을 둘러싼 논문 관련 의혹을 강력 부인한 데 이어, 한명숙 총리도 교육위 해명 직후 노무현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려던 방침을 바꿔 ‘하루 이틀 여론을 수렴해 거취문제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퇴 불거진 방향으로 기울던 청와대는 사실상 청문회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교육위 회의 종료 직후 “도덕성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김 부총리의 사퇴 문제를 더 고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등 야당은 노 대통령에게 김 부총리를 즉각 해임하

았을 경우 8월 임시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을 제출키로 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논문 관련 의혹을 다룬 교육위에 출석해 ‘5대 의혹’으로 꼽히는 ▲제자 논문 표절 ▲BK21 연구비 중복수령 ▲논문 실적 중복보고 ▲논문 중복 게재 ▲성북구청장 박사학위 논문 용역 의혹 등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김 부총리는 “언론이 왜곡 보도를 하고 있다.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고,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면서도 “사퇴는 무슨 사퇴냐”며 일단 자진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임동욱기자 tuim@



## “광주商議 회장 연임 금지”

선거권도 회비 납입액따라 차등뒤야

광주경실련 개혁안 제시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선거를 둘러싸고 불합리한 정관 개정 등에 대한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광주상의가 파행 5개월째를 맞고 있어 하루빨리 개혁안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8면>

광주경실련은 1일 광주시 북구 중흥동 경실련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상의가 지역발전 위한 경제단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합리한 운영제도를 개선하고, 연구 및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며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특히 회장 등 임원 선거규정의 경우 선거 3일전까지만 회비를 납부하면 선거권을 갖는 현행 규정을 선거전년도 3년 회비납입자에 한해 선거권을 부여하고, 현행 1인1표제도를 회비납입액에 따라 1~30표를 주는 차등선거로 바꿔야 한다는 개선안을

내놓았다. 또 선거관리업무를 광주선거관리위원회에 이관, 중립성을 확보해야 하고 회장 선출방식도 호선에 의한 밀실투표가 아닌 무기명 비밀투표로 전환하는 한편 정경발표회 개최와 정책공약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회장 권한을 견제하고 회원사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회장 연임 금지(단임제 검토) ▲회원위원회 등 분과위원회 활성화 ▲외부 감사관 인제도 시행 ▲정기적인 운영수지 공표 등이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공회의원 정수에 대해서도 광주경실련은 광주시의 경제규모를 감안해 현행 42명에서 80~100명으로 확대하고, 산업별 의원 할당제 도입을 제안했다. 의원 할당제는 산업별 의원 정수의 최고 30% 이상 점유 제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종대기자 jilee@kwangju.co.kr

## ‘전라도 비하’ 물의 이효선 광명시장

## 영암군과 자매결연 일방 파기

“없었던 일로 하자” 김일태 군수에 전화 통고  
광명시의회도 고흥군의회와 결연중단 검토

‘전라도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이효선 광명시장이 지난달 말 14년동안 자매결연을 지속해 온 영암군에 결연 파기를 일방적으로 통고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여기서 한나라당이 다수인 광명시의회까지 고흥군의회와 맺었던 자매결연을 중단할 계획이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영암군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달 20일 김일태 영암군수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그동안 교류 실적도 별로 없었고 다른 자치단체와 결연해야 하니 (영암군과의) 자매결연은 없었던 일로 하자”고 말했다는 것이다.

김 군수는 “이 시장의 전화는 협의 차원이 아니라 사실상 통고였다”며 “이기가 없어서 ‘그럼 그렇

게 합시다’라고 대답한 뒤 전화를 끊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시장은 지난달 30일 해명자료를 통해 “자매결연 문제는 관련 행정절차를 잘 몰라 벌어진 일이며 결코 호남을 배제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영암군과 광명시는 지난 1992년 결연 이후 비교적 활발한 교류활동을 펼쳐왔다. 지난해 12월과 올 1월 초에는 광명시 공무원 40여명과 자을방법대, 바르게살기 회원들이 폭설피해를 입은 영암을 잇따라 찾아 복구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광명시의회도 고흥군의회와 교류활동 중단은 논의 중이어서 또 다른 파문을 낳고 있다. 광명시의회 나상성(열린우리당) 의원은 1일 광주일보와 전화통화에서 “의

회 운영위가 지난달 26일 임시회에서 고흥군의회와 자매결연을 끊고 총남 당진군의회와 새롭게 결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광명시의회와 고흥군의회는 지난 1999년 6월 자매결연 이후 합동세미나와 상호 방문 등 꾸준한 교류를 해왔다.

나 의원은 “도대체 교류 중단 사유가 뭐냐고 따지자 이효선 시장이 ‘거리가 너무 멀고 부의장의 고향이 당진이라 그 쪽 싸를 팔아주려고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며 한나라당 소속의 시장과 시의원들의 ‘사전 교감’ 의혹을 제기했다. 광명시의회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 9명과 열린우리당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대해 고흥군의회 관계자는 “향우회로부터 이같은 소식을 전해 듣고 오는 4일 의원협의회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키로 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北, 수해로 8·15축전 취소

북한은 최근 폭우로 인한 피해로 정상적인 8·15축전을 치르지 못할 것으로 판단, 이를 취소한다고 1일 남측에 통보해왔다. <관련기사 5면>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는 이날 “뚝뚝에 큰 물 피해로 인해 북과

남의 인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에 북, 남, 해외 대표들이 모여 앉아 축전을 벌이는 것이 여러모로 고려된다(합당치 않다)고 인정, 올해 8·15 통일행사를 개최할 수 없다는 데 대해 견해를 같이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외래시간교수 초빙공고**  
1. 남부대학교에서는 2006학년도 2학기 외래시간교수를 초빙합니다.  
2. 자세한 사항은 남부대학교 홈페이지 (www.nambu.ac.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접수기간 : 2006년 8월 15일(수)~16일(목)까지  
**남부대학교**  
남부대학교 후기 대학원 세. 박사과정 모집중

**물가 36년 정보의 메카니즘 SINCE 1970**  
국내 최고의 물가전문지  
**綜合物價情報**  
http://www.kpi.or.kr  
정정부패, 물가부담, 민중거리두기  
**물가안국물가정보**  
TEL:1577-7300 FAX:1577-4802

30대여성  
**80%** 피부미용 전문가의 추천을 받았다  
이번만큼은 후회없이  
**답화이트닝**  
IOPE